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생 활 화 학 제 품 및 살 생 물 제 의
안 전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구제결정의 관리, 구제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운영(안 제37조의3)

- 1)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화학·환경·보건·의학·법학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의학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제출요청 자료의 구체화(안 제37조의4)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자료제출 대상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설정(안 제37조의5)

유효기간은 피해의 종류, 유사제도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함.

라. 구제계정 운용·관리,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7조의6, 안 제37조의7)

1)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은 금전신탁, 유가증권 매입,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기업의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함.

2) 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부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마.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안 제37조의8에서 제37조의11)

1) 폐업·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 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는 납부액을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함.

2) 납부할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최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12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그 외 분담금 납부를 체납할 경우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체납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가산금을 부과하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금 산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바. 진찰요구(안 제37조의12)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필요할 경우 등으로 정함.

사. 기타(안 제37조의13, 안 제39조, 안 제39조의3, 안 제40조)

기타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대상,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민감정보 처리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조사단의 조사·감정 등을 위한 운영비 등은 관계부처와
협 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임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3. ~ 9. 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 규제 신설로 규제심사 예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37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제5장의2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2.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환경부장관은 의학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사위원의 선임 기준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비상임 조사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의4(자료 및 의견의 제출요청) ①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법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통계청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 신청자 및 구제급여 대상자의 유족

4.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살생물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5.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

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

②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전단에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의료기록·건강보험·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4.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
5.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6. 살생물제품의 성분, 배합비율, 유해성, 제조·수입량 및 판매량 등
7. 「통계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사망원인통계자료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

금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7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구제급여 대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유효기간 갱신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7조의6(구제계정의 관리 및 운용) ① 법 제48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서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계정 증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5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4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14제1항 각호에 따른 구제급여·경비·비용의 지급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구제계정의 관리 및 운용

제37조의7(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운영기관 소속 임직원 중 살생물제품 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자산운용, 재무관리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그 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임·해촉, 제척·기

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7조의8(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48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16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48조의16제3항에 따른 원인제품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원인제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원인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2. 제7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
3. 제8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원인제품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법 제48조의16제3항에 따른 원인제품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
제조·수입업자의 점유율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정한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
별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⑤ 법 제48조의16제4항에 따른 원인제품 판매비율을 산정할 때 원인
제품의 총 판매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
조·수입업자의 판매수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제7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
자의 판매수량
2. 제8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의 판매
수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⑥ 법 제48조의16제4항에 따른 원인제품 판매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
제조·수입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
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된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제조·수입업
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원인제품 제조·수

입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법 제48조의16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48조의16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제37조의9(가산금) 법 제48조의16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의10(이의신청) ① 법 제48조의19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과를 통보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7조의10에 따른 가산금 산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7조의11(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②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하려면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의12(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48조의17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법 제48조의17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37조의13(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8제1항에 따라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받으

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8조의1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1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④ 진료비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제2항”을 “법 제5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운영

8.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접수와 신청 내용의 검토·확인

9.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감정

10.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검토·확인

11. 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신청의 접수와 신청내용 및 피
해등급 변경 등을 위한 검토·확인, 결과의 통지
12. 법 제48조의7제1항 및 법 제48조의8에 따른 구제급여 및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13. 법 제48조의9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통지, 부당이득의 환
수
14.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와 청구 내용의 검토·
확인
15. 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검사·조사의 요구
16. 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업무를 조사단에 위탁한다.

제6장에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민감정보의 고유식별처리 업무) 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
1항, 법 제48조의16제1항,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등에 관
한 사무

2. 법 제48조의5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의14에 따른 급여, 경비, 비용 등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40조 중 “법 제60조제1항”을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48조의3제2항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	300	400	5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u> <u>구제</u> <u>제37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u> <u>의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u> <u>관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u> <u>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u> <u>“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u> <u>다.</u> <u>②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u> <u>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u> <u>한다.</u> <u>③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u> <u>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u> <u>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u> <u>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제</u> <u>5장의2에서 “운영기관”이라</u> <u>한다)의 임직원</u> <u>2.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④ 환경부장관은 의학적 판단이</u> <u>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u> <u>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u>

<신 설>

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사위원의 선임 기준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비상임 조사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의4(자료 및 의견의 제출요청) ①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법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통계청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

다), 신청자 및 구제급여 대상
자의 유족

4.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살생물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5.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6.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에 따른 요양기관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
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4
8조의4제3항에 따른 피해 사
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
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
·법인·단체

②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전단
에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의료기록·건강보험·살생물
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4.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
5.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6. 살생물제품의 성분, 배합비율, 유해성, 제조·수입량 및 판매량 등
7. 「통계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사망원인통계자료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신 설>

다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7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8조의5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구제급여 대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유효기간 갱신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 설>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7조의6(구제계정의 관리 및 운

용) ① 법 제48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계정 증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5 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4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14제1항 각호에 따른 구제급여·경비·비용의 지급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구제계정의 관리 및 운용

제37조의7(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제계정 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신 설>

가. 운영기관 소속 임직원 중
살생물제품 피해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
람

다. 자산운용, 재무관리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③ 그 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임·해촉, 제척
· 기피· 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
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구제
계정운용위원회”로, “환경부장
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본
다.

제37조의8(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
담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48조
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
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운영

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16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48조의16제3항에 따른 원인제품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원인제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원인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2. 제7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원인제품 제조

·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

3. 제8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원인제품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법 제48조의16제3항에 따른 원인제품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 제조·수입업자의 점유율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정한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⑤ 법 제48조의16제4항에 따른 원인제품 판매비율을 산정할 때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의 판

매수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제7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
무가 면제되는 원인제품 제조

· 수입업자의 판매수량

2. 제8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
되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
자의 판매수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⑥ 법 제48조의16제4항에 따른
원인제품 판매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 제조·수입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된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제조·수입업자의 판매
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분담
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
산종결의 등기가 된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신 설>

<신 설>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법
제48조의16에 따라 산정된 분
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
企業): 법 제48조의16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제37조의9(가산금) 법 제48조의16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의10(이의신청) ① 법 제48
조의19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

<신 설>

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과를 통보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7조의10에 따른 가산금 산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7조의11(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②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하려면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신 설>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
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
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
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
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의12(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48조의17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
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법 제48조의17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37조의13(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8제1항에 따라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8조의18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1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④ 진료비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
--- 법 제54조제2항 및 제4항-----
-----.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운영

8.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접수와 신청 내용의 검토·확인

9.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감정

10.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검토·확인

11. 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

<p><u><신 설></u></p>	<p><u>기간 갱신신청의 접수와 신청 내용 및 피해등급 변경 등을 위한 검토·확인, 결과의 통지</u></p>
<p><u><신 설></u></p>	<p>12. <u>법 제48조의7제1항 및 법 제48조의8에 따른 구제급여 및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u></p>
<p><u><신 설></u></p>	<p>13. <u>법 제48조의9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통지, 부당이득의 환수</u></p>
<p><u><신 설></u></p>	<p>14. <u>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와 청구 내용의 검토·확인</u></p>
<p><u><신 설></u></p>	<p>15. <u>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검사·조사의 요구</u></p>
<p><u><신 설></u></p>	<p>16. <u>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u></p>
<p><u>7.·8. (생 략)</u></p>	<p>17.·18.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p>
<p><u>②·③ (생 략)</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④ <u>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업무를 조사단에 위탁한다.</u></p>
<p><u><신 설></u></p>	<p><u>제39조의3(민감정보의 고유식별 처리 업무) 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1항, 법 제48조의16제1</u></p>

항,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살생물 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의5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의14에 따른 급여, 경비, 비용 등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무

<p>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 60조제1항</u>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u>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u> <u>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u> <u>하여 필요한 사무</u></p> <p>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 60조제1항 및 제2항</u>----- -----.</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연 락 처	(044) 201 - 6819